

광주소방, 작년 구조·구급활동 줄고 화재 늘었다

2025 소방활동 통계 분석... 소방정책 방향 설정 기초자료 활용 구조활동은 줄었지만 수난·붕괴·폭발 등 고위험 구조유형 늘어 환자이송 63.8%가 가정서 발생... 8월, 오전 9~10시 가장 많아 화재발생 5.4% 증가... 금호타이어 등 대형화재로 재산피해 폭증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는 최근 '2025년 광주지역 소방활동 통계 분석' 결과, 전년 대비 구조, 생활안전, 구급건수가 각각 9.0%, 9.1%, 6.8% 감소했고, 화재는 5.4% 증가했다고 23일 밝혔다.

소방활동 통계 분석은 소방정책의 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 자료다.

지난해 광주소방이 구조 출동한 건수는 7960건으로 전년 대비 9.7%(857건) 감소했다. 구조건수는 6239건으로 9.0%(618건) 줄었고, 유형별로는 화재 1307건, 승강기 1243건, 위치확인 1075건 순이었다. 구조 출동과 건수가 줄면서 구조 인원도 3576명으로 전년 대비 9.6%(380명) 감소했다.

전년대비 출동건수·구조건수·구조인원이 모두 감소했으나, 수난·붕괴·폭발 등 고위험 구조유형이 증가했고, 특정 시기·지역에 구조 수요가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다.

구급 활동은 전년 대비 4.3%(3125건) 줄어든 6만9931건으로 하루 평균 191.6건이었다. 한해 동안 구급 출동으로 이송한 환자 수는 4만3738명으로 일평균 119.8명 이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송 환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는 2만 599명으로 47.1%를 차지했다. 10세 미만 소아 환자는 전년 대비 20% 감소해 1206명이었으며, 전체 이송 환자 중 2.8%였다. 환자유형별로는 질병에 의해 이송된 환자가 67.3%(2만9430명)로 가장 많았으며, 추락·낙상 등 사고부상 21.1%(9226명), 교통사고 5.5%(3610명)로 뒤를 이었다. 이송 발생 장소는 가정이 63.8%를 차지했고, 월별로는 8월(9.1%), 시간대별로는 오전 9~10시(6.5%)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생활안전 출동은 1만2258건으로 전년 대비 7.2%(950건) 줄었고, 처리건수도 1만 1242건으로 9.1%(1126건) 감소했다. 출동 유형별로는 별집 제거가 3605건으로 전체의 32.1%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피해복구 지원은 802건으로 전년 대비 309.2% 증가했으며, 이는 배수 조치 등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출동 요청(462건) 증가가 원인으로 분석된다.

화재는 한해 동안 725건 발생해 전년 대비 5.4%(37건) 증가했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72명(사망 8명, 부상 64



명)으로 41.2%(21명) 늘었고 재산피해는 1232억원으로 전년 61억원보다 무려 1916%(1171억원) 급증했다. 화재 재산피해 급증은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 화재, 송정5일시장 화재 등 대형 화재에 따른 것이다. 특히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의 피해액은 1175억원으로 2025년 화재 재산피해의 95.4%를 차지했다. 김희철 119대응과장은 "소방활동 통계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소방정책의 방향을 설정해 안전한 시민사회 구축에 앞장서는 광주소방이 되겠다"고 말했다. /오권철 기자

고압적 언행에 사건 처리 지지부진

광주변호사회, 2025년 광주·전남 사법경찰관 평가 발표 평균 80.0점, 꾸준히 향상... "공정·적법 수사관행 개선을"

#1. 범죄단체와 무관한 사건인데도 수사관이 "너 강패잖아"라고 거듭 말하며 인격적 편견을 드러냈다. 범행을 자백한 피의자에게 "그 말을 믿으라는 것이냐"며 강압적 분위기를 조성했다.

#2. 가족을 공범으로 의심하며 피의자 또는 참고인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가족의 출석을 강요했다.

#3. 수사 과정에 대한 신뢰가 없어 수사관 기피 신청을 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검사 보완 수사 요구에도 사건을 반복 송치했다.

#4. 증거에 의해 고발 전제사실이 부정됐지만 피의자 소환 조사를 강행해놓고 불송치 결정까지 아무런 이유 없이 7개월을 소요했다.

#5. 피의자가 타인 명의 계좌 사용을 인정했지만 최소한의 금융거래 내역 확인조차 하지 않고, 불송치 결정을 했다.

지난 2025년 한 해 동안 변호사들이 법률대리인으로 일하며 겪은 광주·전남 사법경찰관들의 문제 사례 중 일부다.

광주지방변호사회는 22일 소속 회원 변호사 173명이 광주·전남 사법경찰관 853명에 대해 작성한 평가표(총 1522건)를 바탕으로 2025년도 사법경찰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 항목은 ▲청렴·공정 ▲친절·적법 절차 준수 ▲직무능력(신속성, 수사권 행사의 실효력·용통성) 등이었다.

평가 대상 사법경찰관의 평균 점수는 100점 만점에 80.0점으로 나타났다. 2023년 76.57점, 2024년 78.4점보다도 꾸준히 평균 점수가 높아지며 전반적인 수사 관행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부 경찰관들은 인격적 편견이 드러나는 언행과 고압적 태도를 일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 관계 확인에 앞서 피해자에게 사과 의사를 묻는 등 수사 중립성을 훼손할 여단을 갖는 언급도 여전했다.

수사관 기피 신청을 무시하거나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에 대해 충분한 법리 검토 없이 기계적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사례도 있었다.

객관적인 증거 수집에 소홀히 하거나 별다른 이유 없이 사건 처리가 늦어지는 경찰관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평가 의견도 상당수였다.

평가와는 별개로 '잘못도 없는데 왜 변호인을 선임하느냐'며 방어권 보장에 대한 인식이 미약한 경우도 있다고 변호사회는 설명했다.

평가가자 일정 기준 이상 접수된 경찰관서 중 하위권서는 광주 동부서(평균 77.1점)와 전남 곡성서(74.5점)가 선정됐다. 전체 경찰관서 평균 80점보다 낮았다.

다만 변호사회는 회원이 접수한 평가지수의 편차 등을 이유로 하위 경찰관은 따로 선정하지 않았다.

모든 평가 항목에서 고르게 호평을 받은 우수 사법경찰관 10명은 실명 공개했다.

강항(광주 동부서 청소년보호계), 고석룡(광주 북부서 교통조사팀), 김세훈(전남청 형사1팀), 김영광(광주 서부서 여성수사1팀), 김홍순(광주 서부서 여성수사4팀) 수사관 등이다.

박병용(광주 광산서 여성수사2팀), 임태인(광주 서부서 여성수사3팀), 이다영(광주 서부서 여성수사4팀), 이용남(광주 광산서 형사4팀) 수사관도 우수 사법경찰관으로 선정됐다.

관서별 소속 경찰관들의 평균을 기준으로 산정한 우수 관서는 광주 광산서(평균 83.2점), 전남 무안서(88.8점)가 선정됐다.

광주지방변호사회는 "사법경찰평가 진행되며 조금씩 인식 변화가 생겨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편향적 태도와 인격적 편견이 드러난 언행, 고압적 분위기 조성, 객관적 증거 수집의 소홀, 사건 처리 지연 등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총평했다.

이어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 눈높이에서 수사 첫 단계부터 공정하고 친절하게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 부정적 평가 사례에 대해서는 적극 개선을 요청해 공정하고 적법한 수사권 행사가 이뤄지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송현근 기자

도시 정체성 상실·역차별 문제는?... 광주·전남 통합 광산구 공청회

도시농촌 농민 차별·교육현장 혼란 등 질의 잇따라

해 광주시가 사라지면 도시가 가진 정체성도 사라지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강기정 시장은 "광주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특별시로 더 커지는 것"이라며 "소방안전부터 행정서비스 질도 높아지게 된다. 지금보다 안 좋아지는 일은 없다"고 답했다.

분량중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는 한 시민은 "광주에 2만5000여명 농민은 광역시라는 이유로 전남 농민과 달리 각종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이 있다"며 "통합 이후에도 역차별이 계속되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박군택 의원은 "도시 농민들도 각종 지

원을 받을 수 있도록 농어촌기본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행정통합과 상관 없이 역차별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방대한 내용을 담은 특별법이 너무 빠르게 추진되는 것 아닌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의 효과나 우려되는 부작용 등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답답하다는 반응도 있었다. 행정통합에 이어 지역 학부모 사이에서는 교육통합 추진에 대한 각종 불안도 제기됐다.

한 학부모는 "행정통합이 급하게 추진되는 것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교육통합은 아니다"라며 "백년지대계인 교육을 충분한 숙의과정 없이 진행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학부모는 "광산구 학생들 일부는 왕복 2시간 거리 학교를 통학하고 있다. 전남 학생들이 광주에 오게 되면 학교 배정 문제에 있어 우리 아이들의 피해를 볼 수 있다. 대책이 있느냐"고 질문했다.

대학 관계자라는 한 시민은 "행정통합과 함께 교육통합이 논의 중이지만, 특별법 초안에 고등 교육에 대한 부분이 많이 누락됐다"고 지적했다.

이정선 시교육감은 "지역소멸, 학교 통폐합을 막기 위해 행정통합을 추진 중인데, 자칫 통합의 취지가 퇴색할 수 있다"면서 "전남 학생의 광주 쏠림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거주지 원칙으로 학교를 배정하고 각 학교에 맞는 특성화 사업을 더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민규 기자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에 따라 열린 광산구 시민공청회에서 통합 이후 광주라는 도시의 정체성 상실과 도시농촌 농민들의 역차별 문제 등 우려가 제기됐다. 교육통합으로 인한 원거리 학교 배정을 비롯한 교육 현장의 혼란 등 학부모들의 걱정도 잇따랐다.

광주시와 시의회, 광산구, 광주시교육청 등은 23일 오후 광주 광산구청 운상원 홀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권역별 시민공청회를 열었다. 이번 공청회에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신수정 시의회 의장, 박군택 국회의원, 박병규 광산구청장, 이정선 시교육감, 김명수 광산구의회 의장을 비롯해 시민 300여명이 참석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한 시민은 "광주는 동학혁명과 학생운동, 5·18민주화운동까지 역사와 정체성을 갖고 있다. 통합으로 인

광산소방서, 전기화재 저감 위한 예방수칙 적극홍보

약 25%를 차지하고 있다.

겨울철에는 전기장판, 전기히터, 열선 등 난방용 전기기기의 사용이 급증하면서 과부하, 접촉불량, 노후 전선 등으로 인한 전기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주택과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부주의가 화재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광산소방서는 전기화재 예방을 위해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 금지 ▲전열기기 사용 후 전원 차단 ▲전기장판 접합·구김상대 사용 금지 ▲노후·손상된 전선 즉시 교체 ▲외출 및 취침 전 전기기기 점검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김준행 기자

또한 콘센트 주변에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청소하고, 전기기기 주변에 가연물을 두지 않는 등 작은 습관이 화재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나홍원 광산소방서장은 "겨울철 전기화재는 대부분 사소한 부주의에서 발생한다"며 "시민분들이 일상 속 전기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준행 기자

(주)통일화물은 정성과 책임으로 늘 변함없이 고객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책임있는 물류문화를 만들어가는데 앞장서는 (주)통일화물
나보다 고객을 먼저 배려하는 아주 특별한 만남
이제 (주)통일화물을 만나보십시오.

(주)통일화물이 힘찬 도약을 시작합니다

- 취급차량 : 1t~12t
- 광고전단지 운송·배포
- 중앙지 및 지방지 신문수송전문
- 일반이사 및 포장이사전문
- 정보지·신문 광고대행
- 기업물류 운송 전문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1573-1번지 3층 ☎(062) 956-8500~2 Fax(062) 956-2001